



진 장관, 게임 업계 애로 직접 챙겨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5일 게임 개발 업체인 웹젠을 방문하여 게임개발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현장에서 수고하는 개발자를 격려했다.

이번 기업방문은 진 장관이 직접 나서 게임업계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시장에 밀착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날 진 장관은 "국내 게임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핵심기술 개발 및 선진 해외시장의 진출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업계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문의: 정보통신정책국 지식정보산업팀 정지찬 서기관
(750-2331, jichanung@mic.go.kr)

지역별 SW특화사업 추진

정보통신부는 차세대 물류 U-Port 사업(부산), RFID·모바일 임베디드SW 기반 위험관제시스템 상용화(대구), 광인터넷 기반의 응용서비스 상용화사업(광주) 등 총 10개의 '지역SW 특화육성사업'을 선정하여 향후 2년간 지원키로 했다.

그동안 각 지자체들은 국가 균형발전전략에 따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추진하여 왔으며, 정통부 역시 2004년부터 지자체 자율에 의한 지역특화SW 육성을 지원하여 왔다.

하지만 지역별로 3~4개씩의 특화분야 육성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한정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과 단년도 위주의 사업추진으로 인해 효과적인 지역특화분야 육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통부는 지역소프트타운과 지역SW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추진해 온 기존 지역SW진흥사업을 지역특화SW 육성 위주로 '05년 11월 개편하고 지난 12월 지역공모 및 평가를 통해 선정된 지역에 대해 '06년부터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개편안의 중심이 되는 '지역특화SW 육성사업'은 기존 지역별 3~4개의 특화분야육성을 지양하고, 지역별 1특화 분야를 공모방식에 의해 선정하여 해당 분야의 수요창출을 위한 2개년 단위의 시범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내 특화분야 전문 SW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향후 2개년 동안 총 151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지역특화SW 공모심사에서는 지역에서 선정한 특화분야의 적정성과 추진계획의 구체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으며, 이 2가지 기준을 균형있게 제시한 사업이 결과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문의: 정보통신정책국 소프트웨어진흥팀 김정기 사무관(750-2343, ataper@mic.go.kr)

'정보통신윤리' 교과서 나온다

올 초부터 '정보통신윤리' 교과서가 일선 중·고교에 배포된다. 따라서 최근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문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현직교사와 함께 개발한 중등교과서 '정보통신윤리'가 이달말 인정교과서로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내년부터 전국 중·고등학교에서 교과서로 채택하여 재량활동시간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정보통신윤리' 교과서는 비전공 교사도 원활하게 교육할 수 있도록 이론적 내용과 실제 지도방안을 함께 다루고 있으며, 교사가 수업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30자 시간로 구성되어 있다.

문의: 정보통신기획실 정보이용보호과 이경민 사무관(750-1263, lkm@mic.go.kr)

IT SoC · RF · 정보보호 분야 인력양성 주력

올 가을학기부터는 국내 첨단기술 중심으로 산학이 교육과정을 공동개발하고, 해외 우수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는 IT전문인력 재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정보통신부는 IT기업체, 대학교, 공학교육인증원 및 학회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달 21일 '제2차 IT인력정책 협의회'를 열고, 블루오션형 인력양성, NT·IT 융복합 인력양성 시범사업 등 신규 IT인력양성 사업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IT전공역량혁신 추진성과 이외에도 새로운 IT교육과정 도입·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올 가을학기부터 국내 첨단기술 중심으로 산학이 교육과정을 공동개발하고, 해외 우수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IT전문인력 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산·학·연 공동교육프로그램인 NIT University 운영지원을 통해 산업체가 요구하는 맞춤형 형태로 나노기술을 응용한 IT제품 및 제조장비 전문인력 양성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IT전략분야별 수급전망 및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제시하였다. IT SoC, RF, 정보보호 등 3개 분야에서 2009년까지 필요한 IT고급인력은 516명, 440명, 72명으로 전망하였다.

문의 정통부 정보통신정책국 기술정책팀 이준희 사무관
(750-2325, info0913@mic.go.kr)

금융결제원 공인인증업무 인터넷뱅킹용으로 제한

앞으로 국가기관, 비영리법인 등은 설립목적에 맞는 용도의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업무 영역이 제한된다.

국회는 지난달 8일 본회의를 열고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시스템 장애발생시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 의무화 ▲공인인증서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 ▲정보통신부에 공인인증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향후 공인인증시장은 민간공인인증기관이 보다 활발한 시장참여가 가능하여 보다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되고, 건전한 발전이 촉진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공인인증기관의 시스템 마비 등으로 인해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배상될 수 있도록 공인인증기관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도 의무화했다.

현재 공인인증서는 1000만 이상의 이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이를 부정한 의도로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서의 용도에 벗어나서 부정하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문의 정통부 정보기획실 정보보호산업과 김판열 전자서명담당
(750-1277, pyk31@mic.go.kr)

정보격차해소에 1조 9천억 투입

정부는 취약계층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할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향후 5년간 약 1조 8858억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현재 53.3% 수준인 전체국민 대비 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이 2010년까지 80%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지난달 광화문 청사에서 진대제 장관 주재로 '제5차 정보격차해소위원회'를 열고 교육인적자원부 등 14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제2차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유비쿼터스 사회진입, 고령사회의 도래, 생활 속의 정보기술 활용 확대, 경제 양극화 심화 등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정책추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디지털 세상' 구현을 목표로 '제2차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그 동안 추진된 '제1차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2001~2005)'이 취약계층의 정보접근 및 정보이용환경의 기반 마련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되었다면 이번 2차 종합계획은 '어떻게 하면 IT를 활용하여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고려하는 수혜자 입장에서 마련됐다.

문의 정통부 정보기획실 정보보호산업과 홍사찬 사무관(750-1224, schong@mic.go.kr)